정부조직법 급한 불 껐지만…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정국'

현오석·김병관 등 임명 강행 땐 충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싸고도 대치
4대강·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격돌 예고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극적 합의했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전제로 합의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구성, 각종 국정조사 실시 등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특히,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시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오석·김병관 임명 문제**=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론'이 제기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처리를 놓고 여야의 재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들에 대해 내정자 임명을 저지하는데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현·김 내정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두 내정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도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제·국방부 수장 임명이 지연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박근혜 인사'를 화두로 한 여야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방송 중립성 확보**=정부조직 개편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방송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와 관련, 여야가 '급한 불'은 껐지만 논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 방송 중립성·공정성 담보방안을 논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6개월간 활동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 방안, 종합유선방송(SO) 등의 공정한 시장 점유 장치 마련 방안 등을 마련한다.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는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방송 장악 의도'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동시에 여야가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 SO 채널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국정조사 충돌**=여야는 전날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와 함께 4대강 사업과 함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4대강 사업 국조는 현·전 정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데다 지난 대선 후유증으로 종착역으로 꼽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놓고 여야는 대대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놓고도 난항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기업 순환 출자를 놓고도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朴, 장·차관 '군기 잡기'

수석비서관회의 열어 "출발 늦은 만큼 부처간 업무협력으로 국정 속도 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이후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부 장·차관들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그만큼 대통령과 장·차관 간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 초기 정책혼선을 우려하며 장·차관에 대한 '군기 잡기'를 시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 기조를 잘 이해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달라"며 '구체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지고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거듭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실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차관을 긴장하게 한 것은 박 대통령이 정책혼선의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국정철학에 대한 공감을 강조한 대목이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책혼선 언급은 어떤 사안에 대해 부처 간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호칭을 영어 이니셜 대신 '박 대통령'으로 불러달라고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말미에 이남기 홍보수석에게 언론에 나오는 자신의 호칭이 PP(President Park), GH 등의 영어 이니셜보다는 '박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것도 정치라고 하고 있으니…

주식 백지신탁 부담? 황당한 사퇴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 미처 파악 못한 '보유주식 매각'에 발목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재임 기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연초에 발표한 임원·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황 내정자는 전체 주식의 25.45%를 보유하고 있다.

황 내정자는 이날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식 정리의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해 물의를 야기한 것은 내 불찰이고 책임"이라며 "젊음을 바쳐 자식 같이 키워온 기업을 1개월이라는 법적 시한에 매여서 내팽개치듯 아무에게나 처분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곤혹스러움과 함께 아쉬움을 피력했다. 인선에 또 다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한 '손톱밑 가시'를 제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인사가 사퇴했기 때문이다.

중기청장 내정자의 사퇴는 오는 21일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불똥이 튀었다. 중기청이 산자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기도 돼있었는데, 중기청이 청장 내정자의 사퇴로 업무보고를 못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조정됐다고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황 내정자의 사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인선된 이들 중 스스로 사퇴한 내정자(후보자)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 모두 3명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